

협정문 공개로 거짓말이 드러난 한미FTA 체결 중단하라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멈춰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본)가 6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협상 타결과 정부·언론의 대대적인 홍보 때문에 ‘이제는 끝난 것 아니냐’는 분위기 속에서 잠시 소강상태였던 한미FTA 반대 운동이 다시 힘을 모아 저변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5월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에는, 우려한 바대로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를 공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협정문 공개를 계기로 한미FTA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운동도 힘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 확대 등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의 확대와 삼성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기소도 그 연장선이다.

범국민본이 지금까지 이런 탄압에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정부의 초기 공격이 효과를 보면 그 다음에는 더 강력

한 탄압이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6월 투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뒤늦었지만 범국민본이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 중단’을 6월 투쟁의 기조 중 하나로 삼은 것은 다행이다. 나아가 출석 요구와 벌금 부과 등에 대한 공동 대응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조폭’ 재벌 김승연과 더러운 유착이 드러나 위기에 처한 경찰 수뇌부가 더는 공격을 확대하지 못하게 쐈기를 막아내려야 한다.

집중

한편, 정부는 미국의 요구로 재협상이 추진되더라도 한미FTA 체결은 예정대로 6월 말에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범국민본은 6월에 예정된 투쟁 일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며 최대 규모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6월 24일(일)로 예정된 대규모 투쟁을 변경해 29일(금)에 집중 집회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아쉽



다. 휴일 집회에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급진화하는 청년들도 참가할 수 있고, 또 파업을 앞둔 대규모 집회는 파업 열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말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미FTA 저지 운동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에 걸맞은 행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 일정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화하고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투쟁으로 확대하는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6월 2일 시위도 적극 조직할 필요가 있다. 6월 2일은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한미FTA에 저항한 허세욱 열사의 49재가 있는 날이다. 이날 시위는 6월 말 투쟁으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것이다.

허세욱 열사의 뜻을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짓밟는” 한미FTA를 끝장내기 위한 6월 투쟁을 강력하게 건설하자.



한미FTA와 반대 운동

— 협정문 공개로 드러난 것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 인터뷰

3, 4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특집

5면

반자본주의 활동가

패트릭 본드 인터뷰

— 반신자유주의의 대안 전략

6~7면



국가보안법에 맞선

이시우 작가의 투쟁

12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의

팔레스타인인 학살

8면

새 책 《파배한 혁명》 서평

— 1918년~23년 독일 혁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9면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용하 정책위원장에게 듣는

국립대 법안화 반대 투쟁

7면

www.counterfire.or.kr

석유수탈법에 맞선

이라크 석유 노동자들의 저항

다국적 석유 기업들의 석유 도둑질을 허용하는 새 석유법에 맞선 이라크 석유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부의 양보를 얻다

가짜실 통폐합과 언론 자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의 다툼 이면의 진실은 무엇인가...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허세욱 열사 49재 및 한미FTA 전면 무효화 총궐기 선포 결의대회

6월 2일(토) 오후3시 대학로
주최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인용해도
될까요?”

“[한미FTA의] 여러 가지 효과를 얘기
합니다만, 저도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요. 그러나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노무현

“[열린우리당에서 국정 실패 책임을 져야
할 상징적 인물이 오면 국민들이 우리당
이중대나 아류로 인식하는데 이는 망하는
길 ... 왜 민주당까지 난파시키는 동반자
살의 길을 택하게 하느냐”

— ‘대통합’을 거부하는 민주당 박상천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

— 한화그룹 변호사가 남대문경찰서
수사와장에게 했다는 말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 이견회를 법
정에 세워 삼성그룹 법무실로 전락한 검
찰을 바로잡겠다. ... 검찰청을 국민들은
이미 ‘떡값청’이라 부르고 있다.”

— 삼성 X파일 폭로로 기소당한
노회찬 의원

“부시 대통령이 1시간 남짓한 기자회견
도중 ‘알 카에다’를 19번이나 언
급했지만, 알카에다가 이 공격을 지시
했다는 증거는 없다.”

— 기자회견 중 제비 똥이 옷에 떨어진
부시를 비꼬는 <워싱턴포스트>

“전 세계 국가들에 미친 악영향에서
부시 행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정부였
다고 생각한다.”

—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유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김어진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http://nowar.kdlp.org>)

5월 28일 치를 예정이었던 자이툰 부대 오
중위 장례식이 유족들의 반발로 연기됐다.
오 중위는 자이툰 부대 파병 후 첫 사망자다.

유족들은 “정부가 오 중위의 사망에 대한
수사 결과를 주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장례식
을 치르기를 거부했다.

“이라크에서 약속을 하고 보따리[자료]를
가져왔는데, 우리 가족이 보여 달라고 하니
까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후에
야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가족들
에게 보여 줬어요. 안 가져왔다는 것이 이라
크에서 금방 도착했겠습니까?”(오 중위의
아버지)

“군 당국의 말 번복이 몇 번인지 헤아릴 수
도 없습니다. 이건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
에 더는 논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오
중위의 매형 김승호 씨)

정부는 유족들의 항의에 못 이겨 동영상
등을 보여 줬지만 아직도 수사 자료를 완전
히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유족들은 오 중위 사망 직후부터 정부가
오 중위의 죽음을 자살로 몰아가는 것에 반
발해 왔다.

“활발하고 패기 있고 사교성 많은 성격으
로 미워볼 때 [오 중위가] 결코 스스로 목숨
을 끊을 리 없다. ... 파병된 지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
다”(오 중위의 매형)는 것이었다.

유족들은 이날 장례식 연기를 발표한 기자
회견에서도 정부의 수사 결과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오 중위의 실제 사망 시간이 알
려진 것보다 2시간 45분 전이라는 제보가 있
고, 총기 발사 재연에서 총성이 밖에서도 들
릴 정도였으며, 시신의 총상 부위 탄흔에 의
문이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정부가 그동안 자이툰 부
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들을 철저히 은
폐·축소해 왔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자이툰 부대를 둘러싼 사건·사
고들은 하나같이 은폐돼 왔다. 공개됐을 때
조차도 사건이 발생한 지 몇 개월씩 지난 경
우가 태반이었다. 예를 들어 2004년 노무현
이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기 전날 총기 사고
로 쿠르드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만 다섯
달이 지나 언론의 문의를 받고서야 국방부는
사건을 공개했다.

오열하는 유족들 - 유족들도 무시하며 일사천리로 사건을 끝내려는 정부

지난해 12월 6일 불교방송에서는 <조순용
의 아침저널>, <뉴스 파노라마> 등을 통해 한
군 관계자가 이라크 내 한국군이 이라크 무
장세력의 공격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자
이툰 병사 감전 사고와 자이툰 부대 내 총기
사망 사고의 일부만 국회에 보고했다.

자이툰 부대에 관한 정부의 언론 통제도
계속되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과 <AFP>
등 외국 언론들은 “이러한 강력한 보도 통제
는 미국 주도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30여
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
다. 이런 상황에서 오 중위 사망 사건의 진상
이 제대로 밝혀질지 의문이다.

비극의 원인은 파병 정책이다. 자이툰 부
대를 완전 철수시키는 것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베네수엘라 RCTV 방송 면허 갱신 불허

‘언론 자유’ 침해 아닌 방송 공공성 강화 조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부가 민영
방송 ‘라디오 카라카스 TV’(RCTV)의 채
널 2 방송 면허를 갱신해 주지 않은 것 때
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상원과 유럽연합 의회, 칠레 상원
에서 차베스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결
의안이 통과됐을 뿐 아니라 ‘국경 없는 기
자들’이나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NGO들
도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가 RCTV의 방송 면허
갱신을 불허한 이유는 RCTV가 정부를 비판
했기 때문이 아니라 벌금 미납 등 6백여 건에
이르는 방송법 위반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법을 위반으로 방송이 폐쇄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도
1969년 이후 TV 방송국 세 개를 법률 위반
혐의로 폐쇄한 바 있고, 영국에서도 1992년
에 템스TV가 방송 면허를 박탈당한 적이 있
다.

사실, RCTV는 차베스 집권 전에도 이
런저런 범법 행위 때문에 여러 차례 문을
닫은 적이 있다. 1976년에 편향적 보도
때문에 사흘 동안, 1980년에 선정적 프
로그램 때문에 36시간 동안, 이듬해 포르

노 방영 때문에 24시간, 1989년에 담배
광고 때문에 24시간 폐쇄됐고, 1991년에
는 프로그램 방영 중단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그리고 이런 범법 행위 중 압권은 2002
년 4월 군사 쿠데타 가담 행위이다. 당시
미국의 후원을 받는 베네수엘라 우익들
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RCTV는 정부군
이 평화적 시위대를 공격한 것처럼 필름
을 조작하고, 시청자들에게 반정부 시위
참가를 선동하는 광고를 끊임없이 내보내
고, 쿠데타 주모자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선전·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차베스가
사임했다는 허위 보도를 내보내는 등 노
골적인 쿠데타 지지 활동을 했다.

그러나 차베스를 지지하는 민중이 거리
로 뛰쳐나와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해 쿠
데타를 좌절시키고 차베스를 권좌에 복귀
시켰을 때, RCTV는 하루 종일 옛날 영화
나 만화 따위를 방영하며 언론 본연의 임
무를 외면했다.

이런 방송이 쿠데타 실패 뒤 당장 폐쇄
되지 않고 그 뒤 5년 동안이나 존속하며
끊임없이 반정부 선전·선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또, 이번 조치로 RCTV 방송국 자체가
폐쇄되는 것도 아니다. RCTV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중파 방송을 하지
못할 뿐이고, 위성·케이블·인터넷 방송
은 여전히 계속할 수 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소수 특권층의 사유
물 구실을 하던 공중파 방송에 대한 대중
의 접근 기회를 확대해서 비록 불충분하
나마 방송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에 기여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작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민의 60퍼센
트 이상이 정부를 지지하는데도 대다수
언론 매체는 노골적으로 반정부 성향을
드러내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보통신부 통계를 보면,
2006년 6월 현재 TV 방송국 81개 가운데
79개(97퍼센트), 라디오 방송국 7백9개
가운데 7백6개(99퍼센트), 신문사는 1백
18개 전체가 민간 언론 매체다.

특히, TV 방송 시장의 90퍼센트를 장

악한 4대 민간 방송(RCTV·글로보비
전·텔레벤·베네비전)과 주요 신문들이
모두 정부를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또, RCTV의 소유주인 역만장자 마
르셀 그라니에르는 베네수엘라 전역의 지
역 방송국 40개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RCTV의 공중파 방송 면
허가 갱신되지 않았다고 해서 베네수엘라
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약될 것이라는 우
려는 그야말로 기우이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호들갑일 뿐이다.(베네수엘라에서
는 반정부 세력들이 RCTV 방송 면허 갱
신 불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용
해 모종의 사회 혼란과 소요 사태를 일으
키려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차베스는 오히려 RCTV 같은 언론이
“홀륭한 저널리즘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RCTV한테서 회
수한 채널 2를 지역사회 매체에 배정해서
방송의 민주화를 증진하고 무엇보다 “지
금까지 거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
람들에게 통신 권력을 돌려주겠다”고 밝
혔다.

이수현

한미FTA 반대 운동이 옳음이 입증되다

노무현 정부가 5월 25일에 한미FTA 협정문을 뒤늦게 마지못해 공개했다. 그 결과 한미FTA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진행된 비민주적 ‘밀실 협상’이며, 평범한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협상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만 컴퓨터 화면을 통해 협정문 영문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정문 내용을 꼭꼭 숨겨 왔다. 그리고 이미 한글 협정문 초안을 만들어 두고도 번역본이 없다고 시치미떼 온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협정문은 마지못해 공개했지만 협상 관련 서류들은 여전히 3년 동안 비공개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처럼 자신들의 ‘범죄 기록’을 철저히 은폐하는 한편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 수백 명에게 출두요구를 발부하는 등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에 열을 올려 왔다.

노무현 정부가 찬성 여론을 높이려고 거짓말, 은폐, 축소, 부풀리기 등 온갖 꼼수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협정문 공개로 드러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정문 일부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독소조항이나 잘못된 협상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도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서 실제로는 한국산 인정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수출을 크게 늘릴 것처럼 정부가 선전해 온 자동차·섬유 관세 인하도 미국 기업들의 ‘기대 이익’이 침해되거나 섬유



이번 협정문 공개로 한미FTA가 기업 이익을 위해 대중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제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이 의심스러우면 즉각 관세를 되돌릴 수 있게 해놨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해, 조세 주권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환경 보호도 내던져 버렸다.

범죄 기록

한국의 약값을 ‘선진국 평균 약값(A7 가격)’으로 올리는 것도 정부는 뺏다고 홍보했지만,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이라고 표현만 바뀌서 포함한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약값을 낮춘다며 올해부터 시행한 ‘약값 적정화 방안’도 협정문의 각주에 따라 정부조달 분야로 간주돼 사실

상 약값 인하 정책이 무력화된다는 것도 심상정 의원이 폭로했다.

이로 인해 “[약값 인상 등으로] 연 1조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예상”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규제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됐다.

정부가 성과라고 내세운 금융 세이프가드 도입도 예외 조항과 까다로운 발동요건으로 2조 원을 ‘먹고 튀려’ 한 ‘론스타’ 같은 미꾸라지는커녕 잔챙이들마저 가두기 어렵게 됐다.”(심상정 의원)

또, ‘투자자-정부 소송제(ISD)’에서도 투기지역 지정이나 개발이익 환수 등 집값을 낮추는 주요 정책들은 소송 대상에

서 제외되지 않았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합의에 따르면 ‘네이버’나 ‘다음’도 폐쇄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부속서한에 사이트 폐쇄를 명시한 협정은 한미FTA가 유일무이하다. 음악·영화·유익한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도 가로막고 돈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춘다”며 우편 서비스 민영화도 한미FTA 협정문에 포함시켰는데, 그리 되면 우편 요금은 폭등하고 서비스 질은 떨어질 것이다.

쇠고기 위생검역위원회(SPS) 설치 합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을 더욱 거세게 할 것이다. 결국 “우리네 식탁은 온갖 나라에서 들어오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오르는 ‘광우병 허브’”가 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검역주권이 무력화됐다.”(박상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편집국장)[4면의 관련 기사를 보시오]

노무현은 “[한미FTA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90퍼센트 이상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10퍼센트 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자·서민 등 국민 90퍼센트의 삶을 파괴하는 대가로 기업주와 부유층 등 10퍼센트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방대한 분량의 협정문을 추가 분석해 보면, 평범한 서민들의 삶과 노동권·환경권·건강권·공공성을 파괴해 소수 가진 자들과 초국적기업의 배만 불리는 한미FTA의 본질은 더욱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본과 민주노총의 투쟁·파업 계획은 이제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강동훈

동북아 군비 증강의 위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세종대왕함’ 진수를 겨냥한 것

지난 5월 25일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준 하루였다. 이날 미국은 미사일 요격 MD 실험을 했고, 한국은 ‘세종대왕함’ 진수식을 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와 서해로 발사했다(일본 언론의 보도).

이런 일들은 2·13 합의 이후 미국·북한·남한의 대화가 진행되고 남북 열차 시험 운행이 실현됐지만,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라는 2·13 합의 때 ‘다함께’ 운영위원 김하영 동지는 이것이 “중동에 전념하기 위한 부시의 일시적 양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동에 발목이 잡힌 부시 정부는 일단 북한에 양보하긴 했지만,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을 겨냥한 북한 압박과 동북아 위기 관리자 행세를 중단할 생각은 없다. 그

래서 2·13 합의는 그 초기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자금을 제대로 해제하지 않아서 ‘60일 내로 북한 핵시설 폐쇄, 중유 5만 톤 지원’이라는 1단계가 1백 일이 넘도록 시작도 안되고 있는 것이다.

호전광

부시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기는커녕 ‘테러방지노력비협력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더구나 2·13 합의 직후인 지난 3월에는 한국군과 함께 대규모 전시증원훈련도 실시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식’에서 84기의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고, 미국의 이번 MD 실험 날짜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남한의 군비 증강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일본 ‘니혼TV’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세종대왕함 진수식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대왕함은 남한이 세계 5번째라고 자랑하는 최신에 이지스 전투함이다.

북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는 5월 9일 담화에서 “남조선군 호전광들이 조선 서해 5개 수역에 무력을 증강 배치하면서 이 수역의 정세를 더욱 긴장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지대함(육지에서 함정으로 발사하는)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것도 시사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신형 크루즈 미사일, XK-2 전차, 독도함(대형 상륙함) 등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려 왔다. 이번에도 노무현은 “동북아에서 멈추지 않는 군비경쟁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군비 증강 의지를 드러냈다. 노무

현은 최근 미국의 ‘속도조절론’을 받아들여 대북 쌀지원을 유보하기도 했다.

부시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정례적인 훈련”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척하고 있다. “악의 축”이라며 살기등등하게 북한을 비난하던 때와 판판이다. 마침 MD 실험도 망신스런 실패로 끝났다.

지금 중동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부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콘돌리자 라이스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도 “BDA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며 북한을 달래기에 바빴다.

5월 25일에 일어난 일들은 앞으로는 대화를 하면서도 뒤로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지배자들이 가져올 위험을 힐끗 보여 줬다. 이라크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 운동의 구실은 여전히 중요하다.

전지윤

“이 정부는 국민 건강을 포기했습니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해 9월부터는 뼈가 든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에서 활동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폭로해 온 박상표 편집국장을 만나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들었다.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됐는데, 위생검역 분야 협상 내용에 대해 지적하실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위생검역 분야 협상문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협의 채널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 한국은 ‘접촉 창구’를 만들자고 했고 미국은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설위원회에서는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등의 구체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장 3조 3항의 라 항목을 보면 ‘국제 기구 회의를 위해 문제·입장·의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하려면 그 전에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위원회 설치에 반대했는데 결국 미국 요구대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해결’ 항목을 글자 그대로만 보면 분쟁 해결이 안 되면 WTO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위생검역 문제더라도 형식은 투자자-정부 소송을 이용하면 WTO로 가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투자자-정부 제소가 이뤄졌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분쟁 조정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국의 입장을 병기한 통합협정문이 공개돼야 우리 정부가 협상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를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은 노무현 정부가 포기한 국민 건강을 지키는 투쟁이다

평가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분류한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운전면허가 있으니 음주운전, 과속, 역주행 이런 거 안 한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고 하니까 “운전면허 있으니까” 이런 식입니다.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준으로도 미국은 광우병 통제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국제수역사무국의 통제국 판정이라는 게 얼마나 받기 쉬운거나 하면, 미국은 1억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7년 동안



박상표
‘국민 건강을 위한 연대 수의사 연대’ 편집국장

안 고작 30만 두를 검사했다고 광우병 통제국 판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비공개 의견서에서 “미국은 2005년과 2006년에 발생한 광우병이 어느 농장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목장에서 소가 갑자기 침을 흘리고 쓰러지거나 갑자기 죽거나 하면 목장 주인이 그 소를 검사소에 실어다 줘야 검사가 이뤄집니다. 이처럼 광우병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시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광우병은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널리 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은 광우병 위험 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돼지·닭·개·고양이 사료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동물들의 사체로 만든 사료를 소에게 먹입니다. 이른바 ‘교차감염’이 가능한 거죠.

살고기뿐 아니라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한다는데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영국의 웰스 박사가 광우병에 걸린 38

개월령 소의 골수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나온다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뼈까지 수입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먹게 됩니다.

또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헌혈을 하면 이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폭탄’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지뢰찾기나 러시아인 룰렛 게임하는 기분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너무 불안할 겁니다.

광우병은 아직까지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고 걸리면 1백 퍼센트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과정이 대단히 끔찍합니다. 갑자기 치매에 걸리고 정신 이상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음식물도 삼킬 수가 없으며, 죽을 때 말도 못해서 유언도 못 합니다. 단 한 사람만 이렇게 죽어도 끔찍한데 2007년 4월까지 전 세계에서 1백98명이 감염됐고 그 중 1백88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10명도 죽을 날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 광우병 통제에 공식으로 잡히지 않는 사람이 영국에서만 8천~1만 4천 명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혈이나 수술, 장기 기증을 통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면 건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입니다. 절대로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정말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문제지만 국내에서 광우병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과 똑같이 육골분 사료 사용으로 인한 교차감염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농가 주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농장을 폐쇄해야 하는데 보상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이건 정부가 자기 임무를 완전히 방기하는 것입니다.

기고

‘법정 소란’을 빌미로 한 감치 시도에 저항하자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지난 5월 18일, 법원이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항의한 한국노총 점거투쟁으로 전태후 전 집행위원장 강성철 동지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나는 판사에게 “재판을 똑바로 하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재판장 김동하는 내가 “판결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치 3일을 명령했다.

요즘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른바 ‘일심회’ 사건

첫 재판이 있던 날, 판사는 피고인들이 입장할 때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당원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가 항의에 못 이겨 취소한 적이 있다.

지난 4월 19일 강정구 교수 항소심 공판에서도 86세의 황두완 씨가 “공안검사, 공안판사 물러가라!”고 항의하자 판사는 황노인을 무려 10일 동안이나 구금했다.

법원조직법 61조 1항은 판사가 법정 안팎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란” 행위에 대해 “20일 이내의 구치소 구금”,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한다.

감치 제도는 판사가 법정에서 절대 권력

을 휘두를 수 있게 해 준다. “폭언·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도대체 어디까지를 “법정 소란” 행위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다.

보통 감치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실형을 살아야 한다. 항고 절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애초 결정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결정을 뒤집는다 해도 감치는 결정이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조차 제기할 수 없다.

대체로 ‘법정 소란’ 행위는 비리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에게는 ‘숨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도 시국사건·생계형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파렴치한 판사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부패한 사법 권력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에 대한 민중의 야유인 셈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치 남발, 법원 경비대 강화, 검색대와 법정 CCTV 확대 등 통제와 감시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판결에 항의하는 ‘소란 행위’는 법정 투쟁하는 투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너무나 정당하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반인권 악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이 시점에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지키려는 법정 안팎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판사가 감치 결정을 남발해도 굴하지 말고 묵비하며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는 등 통일된 행동으로 끝까지 맞선다면 그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군사독재를 물려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다. <맞불>은 서너 차례에 걸쳐 1987년 투쟁을 다루려 한다. 첫 순서로 6월 항쟁의 전개 과정을 개괄해 소개한다.

1987년 2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2000년까지는 목숨 걸고 통일을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의 사건들은 군부의 장기집권 야욕을 산산조각냈다.

1987년 6월에 폭발한 항쟁은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낸 전환점이었다.

19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정통성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항쟁은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광주항쟁을 진압한 전두환은 여세를 몰아 사회 통제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그해 12월까지 “노동계 평화”를 구실로 노조 결성을 금지하고 냉각기간 연장, 직권 중재 확대, 제3자 개입금지 규정 신설 등을 통해 노동조합 운동을 원천봉쇄하려 했다. 삼청교육대 등 사회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조치도 추진했다.

그러나 저항은 소멸하지 않고 물밑에서 이어졌다. 광주 진압이 끝난 지 채 1~2년도 안 돼 광주와 부산의 미문화원이 불에 탔다. 노동계급을 사회 변혁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투사들이 늘어났고, 개혁으로는 독재정권을 물려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났다. 오히려 운동이 급진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터져나왔다. 1982년 무려 7천억 원 대에 달하는 장영자 사기 어음 사건에는 전두환의 친인척이 연루됐다. 권력형 비리 사건은 가뜰이나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대중의 증오를 부추겼다.

피플파워

이 때문에 1983년 12월 전두환은 소위 ‘유화 조치’로 대중의 불만을 달래려 했다. 시국 사건으로 제적된 학생들과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왔고 자본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 활동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전두환의 의도와 달리 ‘유화 조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꼴이 됐다. 복직한 학생들은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운동도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85년 4월에는 인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임금 18.7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 파업은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이 주축이 됐다는 점, 현장조합원들이 주도력을 발휘해 노동조합을 민주화했다는 점 등에서 2년 뒤 벌어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의 모습을 미리 보여 준 것이다.

부르주아 야당은 대중의 분노를 표출해 주는 통로 구실을 하기도 했다. 1985년 2·12 총선 당시 김영삼·김대중이

합작한 신민당의 선거운동은 “금기의 언어가 표출된 공간이었다.”(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2권》)

덕분에 신민당은 총선에서 약진했고 이는 대중의 자신감을 고무했다. 1986년 2월 12일부터 시작된 신민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1천만 명 서명운동’은 순식간에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다. 게다가 그 해 필리핀에서 독재자 마르코스가 ‘피플파워’로 물러나는 것을 보며 대중의 자신감은 더 커졌다.

그러자 전두환은 다시 탄압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1986년 이른바 5·3 인천사태가 빌미가 됐다. 전두환은 5월 말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 문익환 목사를 구속하고 10월 28일에는 ‘건대사태’를 일으켜 단일 사건으로 는 최대 규모인 무려 1천2백90명을 구속해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런데 전두환의 이 탄압 강화는 사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 되고 말았다. 탄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온갖 무리수가 터져나왔다. 부천경찰서에서는 여성 활동가를 ‘성고문’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급기야 1987년 1월에 박종철 씨가 물고문으로 사망했다.

정권은 이 사건들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고 오만하게도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해 민주화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겠다

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대중의 광범한 도덕적 공분을 일으켜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1987년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 민정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그의 육사 동기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 대중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울 시내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 전날 연세대생 이한열이 직격 최루탄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도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버스와 택시도 경적을 울리며 항의 시위에 가담했다. 항쟁이 시작된 것이다. 항쟁은 6월 26일 전국에서 2백만 명이 참가해 절정에 올랐다.

6월 항쟁을 학생과 중간계급의 투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항쟁의 주력은 노동계급이었다. 탄압으로 진정된 조직이 없었으므로 노동자들은 개인으로서 거리에서 싸웠던 것이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참가가 항쟁의 규모와 지속성을 좌우했다. 최장집 교수는 “노동자나 기층 민중은 학생들 속에서 정치적 대변자를 찾아내고 있었다. [이런 지지 덕분에]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결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가 상징적 지도부였지만 항쟁은 거의 대중의 자생성에 의존했다. 이들은 대체로 자본가 야당을 정치적 대안으로 여겼다.

자본가 야당 세력이 민중운동과 맺은 관계는 매우 모순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었다. 이들은 애초 국본에 참가하지 않으려 했다가 나중에 운동에 올라탔다. 조현연 교수는 “[이들이] 국본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민중운동 세력이 지배블럭과의 협상에서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방향을 급선회한 데는 지배블럭이 민주당을 협상의 파트너로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에 설 땅이 없어지게 된 것” 때문이라고 했다.

그 후에도 자본가 야당은 투쟁을 밀고

나아가기를 주저했다. “타협과 절충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만” 운운하며 “전국 주요 도시의 엄청난고도 과격한 시위에 대해 …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뒷걸음질치다가 급기야 6월 26일 대회 개최를 반대하기까지 했다. 6월 항쟁이 요구한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자들은 완수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결국 운동의 요구를 끝까지 밀고 나아간 것은 7~9월 대파업으로 일어난 노동계급이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운동의 압력에 굴복해 6·29 선언을 발표해야 했다. 6·29 선언은 정권의 굴복이었을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진출 확대로 운동이 한층 급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거리의 정치 투쟁에서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도 투쟁을 벌여나갔다. 이 점에서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고립된 별개의 투쟁이 아닌 연속적 과정이었다. 독일 혁명이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중파업》에서 묘사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상호 상승효과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대중파업이었던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6월 항쟁으로 시작된 민주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힌 결정적 뼈기였다. 이 투쟁 덕분에 민주화 운동은 1960년 4월 혁명과 1980년 광주항쟁이 겪었던 반동을 피할 수 있었다.

오늘날 20년 전의 대투쟁에서 배울 것이 많지만 두 가지는 꼭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먼저, 6월의 정치투쟁에서 학생들이 한 방아쇠 구실이다. 학생들의 투쟁은 광범한 기층 민중이 투쟁에 나서도록 촉발했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투쟁은 노동계급과 연결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맞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오늘날의 활동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규한

6월 9일 최루탄을 맞고 피 흘리는 이한열. 한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 사망했다

“노동계급과 민중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편집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저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크와줄루 나탈 대학교 교수인 패트릭 본드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맞붙>의 조명훈 기자가 패트릭 본드에게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현황에 대해 물었다.

최근 한미FTA 협상이 타결돼서 앞으로 공공 서비스가 크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옹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남아공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에 이윤 논리를 도입할 때 일어날 일을 잘 보여 줍니다. 빈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는 해체되거나 공공 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가격은 상승합니다. 따라서 당장 빈민과 노동계급이 고통을 겪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 사유화가 하는 구실을 봐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단계 자본주의의 핵심은 모든 것의 상품화입니다. 노동자뿐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공기조차 상품이 됩니다. 생활의 필수 요소들이 시장 논리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의료·학교·수자원 등 공공 서비스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은 생활의 필수 요소 상품화에 맞선 투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며 ‘자유무역만이 살길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합니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어떤 대안을 말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노동계급과 빈민의 국제주의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무역으로, 때로는 무역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버마 민중이 무역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유명한 사례죠.

따라서 이미 대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볼리비아·에콰도르·쿠바의 관계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 대안은 월든 벨로가 말

한 자본의 ‘탈세계화’입니다. 이것은 특히 WTO·IMF·세계은행 등 신자유주의를 촉진하는 국제 기구들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노동자들이 제지하려 하는 양자간 협정(FTA)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회 변화 이후에 민중이 주도하는 진보적 무역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역의 축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사용이 줄고 탄소 배출이 줄어 환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점은 노동계급과 민중 운동의 국제주의를 지속해 남반구와 북반구의 운동이 반자유무역 투쟁의 전략과 대안 — 산업이 좀더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 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좌파 성향 정부들이 그런 대안을 협상중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라틴아메리카 노동 대중이 그런 대안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대안을 선택할 때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입니다. 자본의 탈세계화와 민중의 세계화를 추구할 때 어떤 무역 관계가 그런 투쟁을 고무할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당신은 대안세계화 운동을 전략에 따라 구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세계사회포럼과 대안세계화 운동에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의 말스주의 경제학자인 사미르 아민이 주도한 ‘바마코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마코 선언’은 국제적 수준에서 너무 개량주의적이고, [강령을] 위로부터 운동에 주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두번째는 자율주의 전통입니다. 자율주의는 멕시코 치아파스의 사파티스타 투쟁, 공장 점거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피케테로스 투쟁, 브라질 무토지농업노동자 운동 등을 고무했습니다. 남아공 소웨토의 일부 자율주의 활동가들은 [사용료 연체로 전기 공급이 끊김] 노동자들에게 전기를 다시 연결해 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율주의자들의 투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충분히 오래 지속되지도, 다른 운동과 연결되지도 못했습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 멕시코 오아하카 투쟁이 있습니다. 오아하카 시(市)는 1871년 파리 코뮌을 연상시키는 혁명적 상황이었죠. 그러나 앞서 말한 자율주의 투쟁의 한계 때문에 운동이 사그라졌습니다.

세번째 입장은 앞에서 말한 사례들 같은 투쟁들을 바탕으로 변혁적 정당 건설 전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운동이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그런 정당을 건설할 수 있

다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네번째 입장입니다. 기존의 반자본주의·사회운동·노동운동의 네트워크를 자체히 보면, 자신의 일상 투쟁에 사회주의적 비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이미 존재합니다. 일례로 물 사유화를 물리친 볼리비아 코차밤바 동지들은 남아공 소웨토와 니카라과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에게 다국적기업의 고가품이 아니라 값싼 복제 약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동지들은 지금 남아공의 다른 운동과 연대해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약품이 무료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경을 초월한 운동에서 국제주의적·사회주의적 정신과 탈상품화·탈계급화 정신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운동들이 일상 투쟁을 바탕으로 공동 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세계사회포럼이 그런 공간이 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든 벨로가 지적했듯이 세계사회포럼이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럴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인터넷 내셔널을 건설하는 기초가 될 것이고, 다양한 활동과 투쟁을 크게 전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래 사회주의 사회를 향한 이행기 강령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개량주의적 개량’과 ‘비(非)개량주의적 개량’을 구분하고 대안세계화 운동이 후자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무역 논쟁을 통해 ‘개량주의적 개량’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죠. 어떤 사람은 공정 무역을 통해 무역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아프리카 같은 곳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옥스팜 같은 대형 NGO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개량주의적 개량’입니다. 다소 덜 잔인한 무역 형식을 제안하고 선진국으로 수출을 늘려야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프리카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득을 얻는 자들은 농장 소유주, 광물 수출업자(주로 외국 채굴 회사)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국제 금융자본일 것입니다. 따라서 옥스팜은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개량을 지지한 것이고, 이는 큰 실수입니다. 또, 이런 개량을 지지함으로써 반자본주의 운동이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개량주의적 개량’은 좌파 운동을 건설하고 연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는 운동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미래에 더 많은 개량을 따낼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사실, 이런 ‘비개량주의적 개량’은 ‘자본주의에서 모든 것은 상품이 된다’는 자본의 논리를 노동계급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반박하는 것입니다. ‘비개량주의적 개량’은 최대한 많은 것을 화폐 관계와 단절시키는 것, 즉 탈상품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개량주의적 개량’은 일부 노동자들이 임금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의 형식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인권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또, 노동자들과 사회운동이 국가와 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구조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개량도 포함될 것입니다. 모든 ‘비개량주의적 개량’은 운동의 후퇴가 아니라 성장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국가는 승리를 패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아공의 운동도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무상 물 공급을 성취했어도 국가는 조금만 공급한 후 다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쟁의 목적이 단지 물질적 보상을 더 많이 얻어 내는 데만 있지 않고 일국과 세계 수준에서 사회관계의 혁명적 변화와 권력의 획기적 이동을 쟁취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파괴합니다”

국립대 법인화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정책위원장 정용하 교수(부산대)를 만나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투쟁 계획을 들었다.

정부가 6월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의 목표가 ‘자율성과 경쟁력의 제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율성은 행정과 재정 등을 대학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법안에 따르면 모든 것을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또, OECD 평균 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1.3퍼센트인데 우리는 0.9퍼센트입니다. 그런데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원금을 깎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가는 오르는데 현재 조건만 유지한다는 것은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을 삭감하면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등록금 인상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정부가 통과시키려는 법인화 법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신에 충실한 법입니다. 경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예산을 고정한 후 결국 등록금 인상과 수익사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학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면 교수들도 본분인 교육과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기초·순수학문은 도외시되고 효율적인 학문만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을 성공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법인화 이후 문부과학성(일본 교육부)과 대학 총장이 계약을 맺고 평가를 받는데, 계약 내용을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파면됩니다. 그래서 총장들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데도



국립대법인화 중단하라!!

5월 8일 부산에서 열린 국립대 법인화 반대 집회

있다고 조작합니다.

또, 법인화 이후 효과가 나타났다는 대학들은 89개 대학 중 일부 명문대뿐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법인화 전에도 경쟁력이 있던 대학들입니다.

반면, 수익성을 신경 쓰다 보니 기숙사비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연 1천만 원 정도 지원되던 교수 연구비를 3백만 원 정도로 삭감해, 요즘 [국제] 학술대회에는 일본 교수들이 안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정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수위권 대학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예일대는 18조 원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지방 국립대들은 50억 원 모으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수위권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인화를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수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수를 2~3배 더 많이 뽑아야 합니다. 지금 부산대 교수는 1천1백 명인데, 싱가포르

대학만 해도 3천5백 명입니다.

국립대 공투위가 꾸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이나 앞으로 투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국립대 공투위’에는 국교련·민교협·대학노조·교수노조가 들어와 있고, 학생교대위는 참관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신자유주의 문제제기·교육부와 정책 대화·행동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6월 2일 열릴 법인화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끌고 있지만 우리 활동과 열린우리당의 분열, 대선 등으로 무난히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걱정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당선할 경우인데, 한나라당은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내년까지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 정성휘, 정리 안형우

브라질 룰라 정부 ‘성과’의 진실

지난주 <진보정치> 324호에 실린 브라질 노동자당(PT) 활동가 인터뷰는 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다.

브라질 노동자당이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기아 제로 운동과 가족 기금 프로그램으로 상당수 국민층이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빈곤층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원래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룰라 정부는 초기 3년 동안 빈곤 퇴치보다 외채 상환에 10배나 더 많은 돈을 썼다. 빈곤층보다 국제 금융계 큰손들을 배불리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룰라 정부는 사회복지 혜택을 최저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만 한정하면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노동권과 퇴직연금을 공격했다.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좌파 학자들은 집권 이후 룰라의 지지 기반이 조직 노동자층에서 빈민층으로 변했다고 지적한다. 룰라는 국제 투기자본과 IMF의 요구에 순응하고 그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부 빈민층에게 쥐고리만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그들을 선거 때 이용하는 수동적 지지자로 확보했다. 또, 룰라 정부는 무토지 농업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브라질 농민단체들이 2006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룰라 정부의 농업정책이 맹목히 소수의 대농과 농업기업만을 위한 정책임을 지적한다. 즉, 정부는 국책은행을 통해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을 지원하고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 완화를 적극 지지하면서 거대 농기업의 이익을 옹호했다.

반면, 무토지 농업 노동자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토지 점거 불법 규정을 바꾸는 토지개혁 프로그램은 추진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룰라와 PT를 둘러싼 불법 스캔들에 대한 변명은 궁색하다. 2004년 당시 투표조작 비리료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대선 1차 투표에서 룰라가 과반을 얻지 못하고 결선투표까지 가게 된 데는 야당인 사민당의 비리를 조작하려다 적발된 ‘도시에 게이트’가 폭로된 탓이었다.

집권 후 PT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부정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아 몇몇 PT 지도부와 의원이 사퇴한 바 있는데,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진보정치>가 별다른 반박 없이 PT 지도자들의 변명을 게재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예송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정부를 파괴하려 한다

김용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야만적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지역 공습을 재개한 이래 지금까지 적어도 4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무차별 폭격과 함께 하마스 인사에 대한 마구잡이 체포도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국무장관을 연행했고, 그 전날에는 팔레스타인 교육부 장관, 국회의원 3명, 자치단체장 7명 등 하마스 소속 정치인 33명을 체포·연행했다. 지난해 1월 아랍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졌다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의 인사들을 무더기로 체포·구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마일 하니야 자치정부 총리의 자택 주변도 두 차례나 폭격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의 점령과 억압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상징해 온 하마스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집요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1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속 의원들을 감금했고, 서방 정부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두 중단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활동은 거의 마비됐다. 임금 체불이 지속되자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더 깊은 가난과 절망으로 내몰렸다.

지난해 여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 병

사 한 명의 역류를 빌미 삼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 때문에 수백 명이 죽고 사회기반시설이 대거 파괴됐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일절 중단해야 한다는 안팎의 압력에 시달렸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호하는 파타에

게 통합정부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파타-하마스 통합정부 구성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러한 합의마저 무시한 채 경제제재를 계속했다. 이것은 제국주의 세력의 앞잡이 노릇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심부의 누세이랏 난민촌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팔레스타인인들

을 하기로 결심한 팔레스타인 내 일부 세력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도록 부추겼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 재개 직전 파타 산하 무장 세력들은 하마스 지지자들을 상대로 지난 메카 합의 이후 최대 규모의 공세를 벌였다.

파타

하마스 정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 그리고 파타의 — 이러한 공세는 얼마 전 팔레스타인 활동가 라일라 엘 하다드가 〈가디언〉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폭로한 사실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하다드는 “팔레스타인 통합정부를 무너뜨리고 대체하기 위한 행동 계획의 개요를 담은 미국의 16쪽 짜리 비밀 문서가 요르단 신문에 폭로됐는데 … 그 문서에는 암바스[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와 그의 보안 기구를 강화해 의회를 해산한 뒤 새로 치러질 선거에서 파타 내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의 개요가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 레바논 전쟁 패배 뒤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올메르트 — 지금 그의 지지율은 채 5퍼센트가 되지 않는다 — 는 이번 공세를 사임 압력을 누그러뜨릴 기회로 여긴다. 그는 “이스라엘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측의 휴전 제안을 무시한 채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이라크·팔레스타인·레바논에서 제국주의 세력과 그 동맹들이 저지르고 있는 학살을 멈추기 위해 반전 운동은 계속 중요하다.

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우리는 이를 용인하거나 옹호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밝혔다.

또, 나스랄라는 미국이 팔레스타인 민병대 소탕을 돕는다는 이유로 레바논 정부군에 무기를 대량 공급하는 것도 비난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난해 여름 헤즈볼라를 분쇄하려고 전쟁을 벌인 바 있다. 지금 팔레스타인 민병대 소탕을 빌미 삼아 미국이 레바논 정부군에 제공하는 무기는 언제든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다.

현재(27일) 레바논 총리 푸아드 시니오라는 파타 알-이슬람에게 72시간 내 백기투항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난민 수용소를 전면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4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미 나르 알-바레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헤즈볼라가 이들 — 팔레스타인 난민의 대다수는 지난해 여름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서 레바논 저항세력과 같은 편에 섰다 — 과 함께 레바논 정부의 공격에 맞선 저항을 조직한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반정부 운동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레바논 정부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공격

폭력 사태는 레바논 정부 탓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벌이는 동안 레바논에서는 미국의 또 다른 동맹 — 레바논 정부 — 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 공격은 지난 19일 레바논 정부군이 트리폴리 인근에서 발생한 은행강도 사건의 배후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인 파타 알-이슬람을 지목한 뒤, 이들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레바논 북부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나르 알-바레드를 습격하면서 시작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지난 27일까지 모두 78명이 목숨을 잃었고, 난민촌의 사회기반시설 상당수가 파괴됐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제사업기구(UNRWA)는 나르 알-바레드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 4만 명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정부군의 공격을 피해 외부로 탈출했다고 보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난민촌의 집들이 불타고 거리에 시체들이 나뒹구는 처참한 상황이다.

레바논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병대 조직들이 레바논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고 말한다. 그러나 레바논에 거주하는 사회주의자 바셈 치트는 레바논 지배자들이야말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협해 왔다고 주장한다.

“레바논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들’로 몰아 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교육이나 보건의료 분야 같은 여러 전문직 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레바논 정치인들은 ‘테러 만행’ 운운하며 ‘사악한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바로 그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거리낌없이 종파적 암살단들을 만들어 활용했다.

“집권 세력인 ‘3월 14일 연합’의 인사들을 포함해서 일부 정치인들은 1975년부터 1990년까지 계속된 레바논 내전 기간에 일련의 학살 사건에 가담한 전력 있다.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난민촌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흔히 자체 무장을 하거나 지역 민병대에 가입한다.”

아니나 다를까, 부시 정부는 레바논 정

부의 팔레스타인 억압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미국·아랍에미리트 연합(UAE)·요르단이 제공한 수송기 8대 분량의 탄약과 군사장비가 25일부터 이들 동안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도착했다. 파타 알-이슬람의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이 제공한 군수품에는 신경가스 와 집속탄이 포함돼 있다.”

신경가스

이번 폭력 사태는 레바논 정부 탓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레바논 정부군의 학살과 미국의 학살 지원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확고히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레바논 정부군의 공격 초기에 양비론에 가까운 성명서를 낸 헤즈볼라가 최근 정부군의 난민촌 진입 시도에 반대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 지난 25일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나르 알-바레드 난민촌과 팔레스타인 민간인

《패배한 혁명》(크리스 하먼 지음, 풀무질)

독일 혁명에 대한 유일한 책

클레어 퍼몬트
영국의 사회주의자

독일의 지도적 사회주의자 칼 리프크네히트는 카이제[독일 황제]의 궁전 창문 너머로 군중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자유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모든 독일인의 자유로운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독일인에게 손을 내밀며 세계 혁명을 완수하자고 호소합니다. 세계 혁명을 원하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수천 명이 손을 들었다.”

1918년 11월 독일 혁명의 유쾌한 나날들은 그랬다. “4년 간의 전쟁 때문에 피 흘리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이제 무장한 병사들과 붉은 깃발들을 따라 교외에서 도심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구(舊)질서는 일소됐고, 왕정은 무너졌다. 이렇다 할 권력을 가진 기구는 노동자·병사 평의회뿐이었다.

그러나 하먼이 보여 주듯이,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별개 문제였다.” 그 뒤 5년 동안 독일은 혁명적 열정과 반동적 공세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노동자들은 두 차례나 — 1920년 카프 무력정변 뒤에, 그리고 1923년에 — 권력 장악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그 때마다 그들의 희망은 좌절됐다.

1982년에 초판이 나왔고 1997년에 재판이 발간된 이 흥미진진한 책의 중심 주제는 독일 혁명이 패배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많은 냉소적 비판가들의 주장과 달리, 독일 혁명의 패배는 불가피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은 존재했다. 그러나 주관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물음은 이렇다. 좌파 단체들은 급진화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이끌고 권력을 장악하기를 원했는가? 또는 그럴 수 있었는가?

좌파 단체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는 사회민주당(SPD)이었다. SPD는 당원이 1백만 명이었고, 선거에서 4백50만 표를 얻었

고, 90개의 일간지를 발행했고, 수십 개의 클럽과 수백 명의 상근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또, 맑스주의 연사를 늘어놓았다. 가히 무슨 일이든 이를 성 싶었다.

그러나 혁명의 열기라는 시험에 빠지자 SPD는 혁명적 변화의 전망보다는 낡은 자본주의 질서를 선호했다. 이 점은 이미 1914년에 분명히 드러난 바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이 터지자 SPD는 지배계급과 같은 편에 섰던 것이다.

1918년 11월에 혁명이 분출하자 SPD는 노동자 대중에 대한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좌경화해야만 했다. 그래서, 왕정을 구하려 애쓰던 SPD는 갑자기 공화국을 선포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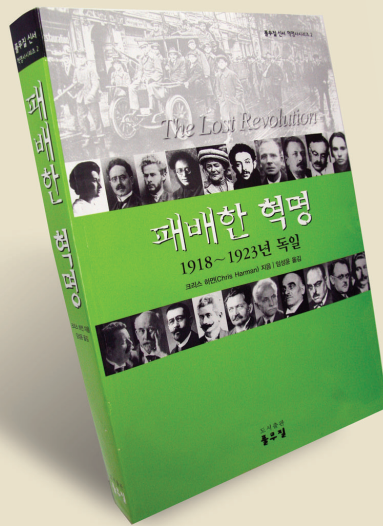
그러나 SPD는 독일 전역을 휩쓸며 점차 성장하는 혁명적 소요가 자신의 진정한 적(敵)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무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구질서의 군대인 자유군단(Freikorps)을 지원했다. 자유군단은 머지않아 좌파들을 상대로 일련의 살인 테러를 감행했다.

제1차세계대전

SPD와 혁명적 좌파 사이에는 독립사회민주당(USPD)이 있었다. 1917년에 SPD에서 분열해 나온 USPD도 말로는 좌파적 연사를 늘어놓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의회 내의 행동을 원했을 뿐이다.

USPD 같은 정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대중 투쟁의 시기에 수많은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그런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고, 혁명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과 공유할 것이다.

하먼이 입증하듯이, 여기서 핵심 문제는 개량주의 정당들이 자신들을 배신했음을 노동자들이 깨달았을 때, 잘 조직되고 규율 있고 경험 많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이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1918년 11월에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가 이끄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3천 명쯤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개량주의·중도주의 단체들과 별개로 조직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혁명적 위기가 발생한 지 몇 주 뒤인 1918년 12월에야 독일공산당(KPD)이라는 독자 정당을 건설했다.

그래서 KPD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당원들은 응집력 있고 일관된 지도력을 제공할 수 없었다. 예컨대 1919년 1월에 KPD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SPD의 도발에 때 이른 봉기로 대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봉기가 실패하자 SPD는 자유군단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었고, 자유군단은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를 비롯한 지도적 활동가들을 대거 살해했다.

그 뒤에도 5년 동안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하먼은 그 때마다 계급 세력 저울을 설명하고 ‘주관적 조건’, 특히 당원 약 20만 명의 정당으로 성장한 KPD의 영향력과 전술을 분석한다.

오판

가장 흥미로운 것은 투쟁의 주요 고비마다 하먼이 KPD의 전술을 자세히 살펴보는 부분이다. 하먼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검토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언제 옛 노동조합을 떠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하는가? 수많은 노동자들이 행동을 요구하고 있을 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비극적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공세로 나아가고, 어떤 상황에서 수세를 취해야 하는가? 의회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먼은 그런 전술적 결정들이 혁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계급 전쟁은 한 가지 점에서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즉, 특정 시점의 절대적 계급 세력 저울만이 전쟁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적군의 강점과 약점에 맞게 자신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 한 순간의 오판(誤判) 때문에 승리의 문턱에서 혼란과 붕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독일 혁명에서 오판이 거듭된 이유는 흔히 KPD 지도부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오버하다가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독일·러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졌고,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로 가는 길이 닳았다.

《패배한 혁명》은 역사를 위한 역사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역사책이다. 따라서 세계를 변혁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이 책을 꼭 읽어 보기 바란다.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1997년 4월 호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1918~19년 독일 혁명 당시 베를린 거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공산당원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인종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전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시우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행동하자

분단과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대인지뢰에 반대하는 사진들을 찍고 게시하는 것. 이것이 반국가적 행위인가. 이런 사람을 반국가적이라며 감옥에 가두는 국가야말로 반인륜적 국가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런 국가에 반대해야 한다.

〈맞불〉45호를 읽고

“국가보안법·이종 마녀사냥의 확대를” 저지하라

정말이지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방어 투쟁은 내가, 나의 가족이, 바로 옆 동지가 잡혀가고, 탄압받는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맞서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시우 씨와 부인 김은옥 씨의 심정으로 탄압에 맞서는 투쟁을 적극 건설해야 할 것이다.

김태현

더 큰 바극이 벌어지기 전에 당장 철군하라

이라크의 현재 상황은 미국이 5천 5백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짓고 있는 미국 대사관 신축공사에서도 드러난다. 대사관은 거대한 방탄 장벽으로 둘러쌓일 예정인데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안전을 위해 대사관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외교관인 에드워드 펙은 미 대사관 신축을 바그다드의 현재 상황에 빗대어 비판하며 “전 직원이 대사관 안에 헬멧을 쓰고 살면서, 모래 포대 뒤를 기어다닐 판”이라고 말

구속된 이시우 작가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죽겠다며 무려 38일째(5월 27일 현재)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틴 루터 킹은 “사람은 누구나 부당한 법률에 불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목숨을 건 그의 투쟁에 우리는 그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답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

한의 도리가 아닐까. 부당한 법률, 국가보안법을 무시해 버리고 각자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그 문제의 사진들을 게시하자. 그리고 당당하게 한마디 더 덧붙여주자. “나도 구속하라!”, “나도 이렇게 했으니 구속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시우가 됨으로써 국보법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

손규석

했다.

그 자신이 폭력의 원인인 미군을 포함한 점령군들이 이라크에 남아 있는 한 폭력 행위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충실한 점령 동반자 — 역겹게도 지난 5월 23일 미 하원 외교위에서는 한국의 파병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 인 한국의 자이툰도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속히 돌아와야 한다.

김태현

‘가가호호 방문 운동’의 성공

지역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이미 서명했다는 민주노동당 지지자들’과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을 찍었고 당사에 놀러가고 싶다’는 사람들을 찾아냈다는 것이 참 고무적이었다. [내가 속한] 지역위 위원장에게도 이 활동을 소개하며 〈맞불〉을 판매하고, 사무국장장과 조직국장을 설득해 다음 주 가가호호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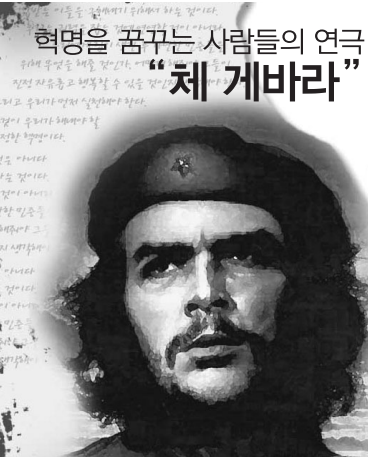
류민희

‘다함께’가 지역 활동에도 신경 썼으면

현재 혼자서 지역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동지 외에도 한 두 명 정도

의 지역 조직자가 더 투입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전국적 네트워크 건설과 지역 기반 안착화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일단 그 전이라도 혼자서 지역 조직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지에 대한 금전적 배려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함께’ 회원들을 포함해 주변에 개인적인 지지(금전적인)를 조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김태현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의 연극 “체 게바라”

기간: 2007.5.30(수)~6.3(일)
일시: 수·목(오후7:30), 금·토·일(오후4,7:30)
장소: 여의나루 한강시민공원 문화마당 내 천막극장
주최: 나무닭움직임연구소
www.woodchicken.com

지역사회 포럼

서울 동부
87년 6월 항쟁 20주년:
민주주의 시계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일시: 6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연사: 전지윤(주간 〈맞불〉 공동편집자)
장소: 동부여성플라자 3층 (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9731-7299

서울 남부
87년 6월 항쟁 20주년:
민주주의 시계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일시: 6월 13일(수) 오후 8시
연사: 한규한(주간 〈맞불〉 기자)

장소: 방배1동 주민자치센터 3층 (방배역 3번 출구)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495-9925

부산
지구온난화 —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일시: 6월 8일(금) 오후 8시
연사: 한정필
(‘부산 환경과 자치 연구소’ 연구원)
장소: 토즈(서면 마리포사 4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552-7696

대학 맑스주의 포럼

고려대 맑스주의 포럼
1987년 20주년 — 민주주의 시계는 어디쯤 왔는가
연사: 한규한(주간 〈맞불〉 기자)
일시: 6월 7일(목) 오후 6시 30분
문의: 010-4569-0501

한국 외대 맑스주의 포럼
자유무역 — 신화와 현실
연사: 이정규(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 활동, 경상대학 경제학과 강사)
일시: 6월 7일(목) 오후 6시 30분
문의: 010-4670-1392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했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중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모순된 의식에 개방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최근 <한겨레>가 실시한 “국민 이념 성향”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퍼센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3퍼센트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여러 사회 현안에서 일관되게 진보 입장을 취했다. 대학생의 경우, ‘일관된 진보’ 입장이 ‘일관된 보수’ 입장보다 두 배나 더 많았다.

《말》지 여론조사에서도, 40퍼센트가 넘는 대학생들이 자신을 “진보”로 규정했다. 70퍼센트가 현재의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답했고, 40퍼센트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답했다.

이런 결과는 오늘날 대학생들이 전쟁과 신자유주의 등이 낳은 부조리와 모순을 직접·간접으로 경험하며 급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국내외의 활발한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이런 급진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급진화와 모순

그러나 이런 급진화와 함께, 좀더 복잡적이고 모순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겨레> 조사에서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진보정당이 사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지지 후보 선호도에서는 이명박이 1위였고 그 다음이 무응답, 박근혜 순서였다.

‘세금을 올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50퍼센트를 넘었지만, 그와 동시에 ‘분배보다 성장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70퍼센트를 넘었다.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면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확대할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견은 30퍼센트 정도에 그쳤다.



‘다함께’가 올해 3월에 주최했던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9가지 주제’토론회에 참가한 대학생들 — ‘급진화’와 모순된 의식을 함께 봐야 한다

또, 한 조사에서는 절반 정도의 대학생들이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 노선’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도,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말》지의 지적처럼,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정치 성향을 물으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나는 진보적이고, 이명박을 지지하며,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에 대해서는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FTA는 비준돼야 [한다.]”

이런 모순된 생각의 저변에는 무엇보다 개혁 정권을 자처했던 노무현 정부와 열

우당에 대한 환멸이 작용하고 있다. 가짜 개혁에 실망하고 경제 위기로 인한 경쟁에 지친 많은 대학생들은 명쾌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공백의 일부를 이명박 같은 정치인이 메우고 있다. 경제 성장에 대한 환상과 ‘개혁적’이라는 오해와 착각을 이용해서 말이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과 재보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 거품이 꺼지고, 박근혜와의 진흙탕 개싸움이 격화하며 이명박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처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대안의 유동성은 여전히 매우 크다.

급진화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로 모순된 의식 때문에 흔쾌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 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오늘날 진보적 학생 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대학생들의 급진성과 모순 둘 다를 보고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점을 중심으로 광범한 학생들을 만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이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진보적 대안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서범진

민주노동당의 대선 도전

민중참여 경선제가 더 많은 지지를 받으려면

민중경선제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도전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논쟁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동안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다함께’는 민중경선제의 기본 취지에 공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로만 제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진보진영 단결을 위한 논의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해 왔다. 그 방식도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민중경선제 주장을 해당 행위로 몰아가는 흐름이 있는 듯해 아쉽고 안타깝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민중경선제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특정 의견그룹의 음모’라고 매도하는 것은 토론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민중참여 경선제’로 민주노동당 조합원과 전농 회원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외연 확장과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은 선

거라고 야단법석을 떨고 언론의 조명도 받는데 정작 민주노동당 조합원들이 선거 때 손가락만 빨고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노동당 이영희 정치위원장의 지적은 공감할 부분이 있다.

도전

다만,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민중경선제는 현찰인 반면,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어음’이라며 민중경선제와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계속 대립시키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

민중경선제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일부 지도자들은 진보진영 선거연합 추진 움직임을 두고 “집토끼가 뛰쳐나가게 생겼는데 산토끼만 쫓아다닌다”는 식으로 폄하한다.

민중경선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 [을] 재고[하고] 당과 민주노동당의 관계 [를] 재정립”하겠다고 압박하는 급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도부의 태도는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지나치다.

민중경선제로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출한 뒤에야 진보대연합이 가능하다는 ‘텃밭’[우선]론은 실제로는 연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당원 5만여 명과 민주노동당 조합원, 전농 회원 수십만 명이 선출한 민주노동당 후보와 대등하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는 진보 단체나 개인이 누가 있을까? 프랑스 대선에서 급진좌파들이 보여 주었듯이 어느 쪽이든 먼저 후보를 결정하고 나면 자체의 관성과 압력 때문에 후보 단일화 논의가 더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류 정치권의 분열과 위기에서 비롯한 정치적 공백을 차지하려는 진취적·적극적 도전 자세이지, ‘집토끼’(기존 지지층)나 잘 챙기자는 보수적·소극적 자세가 아니다. ‘독재정권의 후예’나 ‘개혁 사기꾼’들이 ‘산토끼’(개혁 염원 대중)를 기만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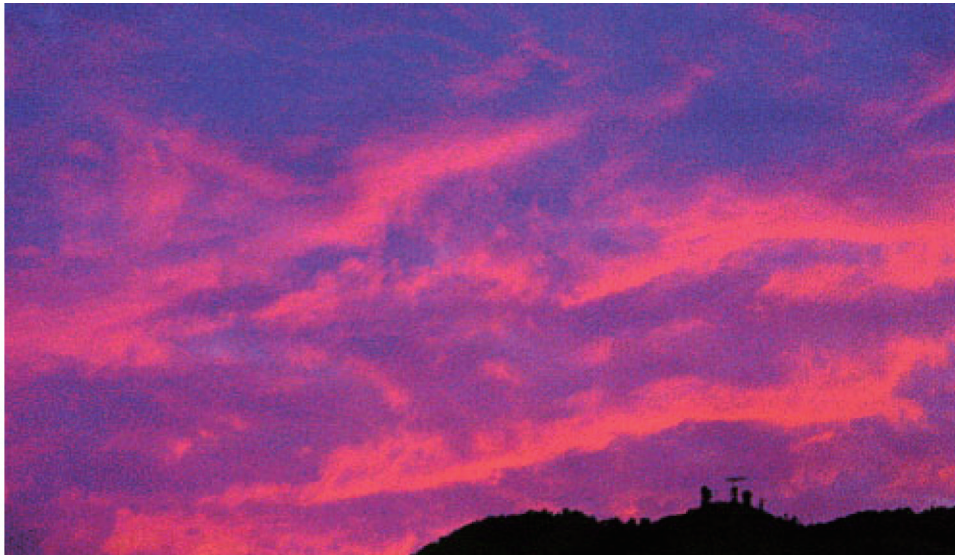
주류 정치권의 위기와 한미FTA 반대

운동이 만들어 낸 정치적 기회를 활용하려는 유력한 방안인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제대로 추진해 보지도 않고 ‘현행 선거법상 어려움’이나 ‘규약 개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포기할 것인가. 도전해 보지도 않고 부정적 가능성만 계산하고 앉아 있어서는 지금처럼 정치적 역동성과 가변성이 큰 시기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진보진영과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하겠다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열의를 실현할 방법은 결코 막혀 있지 않다. 대선의 정치 지형을 급진화시킬 수 있는 한미FTA 반대 투쟁과 파업 건설에 적극 나서면서, 이것의 정치적 표현체인 진보진영 선거연합 추진의 주체가 되려는 슬기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더 큰 그림과 목적 하에서 민중경선제가 찬반 논의와 투표에 붙여진다면 ‘다함께’는 찌뚱한 기분으로가 아니라 매우 흔쾌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호중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 이시우 씨의 작품과 작품 설명
“철원 이평리의 김준권 할아버지가 죽었다던 지뢰밭을 찾아갔을 때 들꽃 한 송이가 지뢰에 기대 피어 있었습니다.”(좌)
“전파의 기교도 빛의 장엄함만 못하다” - 강화도 고려산 미군 통신 시설(우)

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이시우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에 맞선 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무려 41일(5월 29일 현재)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강원도경 보안수사대는 농민 정설교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가 범민련과 전농 홈페이지에 올린 시화(詩畵)가 ‘북한을 찬양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그 시화는 대부분 한미FTA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한미FTA 추진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의 애환을 다룬 내용이다. 북한핵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약간 있지만, 이는 사법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다.

같은 날 검찰은 <다시쓰는한국현대사>의 저자 박세길 씨를 소환·조사했고, 그 전날인 21일 법원은 북한 대남 공작원 접촉 혐의로 77세의 강순정 노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렇듯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도, 진보진영 일각과 심지어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 내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사문화했다’는 착각과 주장이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남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는 착각이나 종파주의적 동기에서 탄압에 눈

감거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외면하는 일부 PD경향도 문제지만 탄압의 주된 표적인 NL진영도 투쟁에 적극적이지 않다. 북미관계·남북관계가 진전해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자연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2·13 합의 이후에도 탄압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자동으로 국가보안법 소멸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심회’ 재판에서 검사는 남북관계 진전이 가져올 대북 안보의식 불감증 때문에 피고인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단지 ‘반통일 악법’이 아니라 사회 진보와 변혁을 위한 운동을 억누르고 대중의 정치적 급진화를 막으려는 지배자들의 무기인 것이다.

이시우 씨가 박해받는 이유는 주로 그의 반전·평화 활동 때문이다. 정설교 씨의 사례도 분명히 한미FTA 반대 운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국가기밀인가?

최근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군사기

밀 보호’를 빌미로 우리 운동을 탄압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이시우 씨는 열화우라늄탄이 배치된 주한미군 기지 현황, 대인지뢰 살포 현황, 핵잠수함 진해 기항 사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등의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도 공안검사는 민주노동당 내부 정보가 ‘국가기밀’이라며 활동가들을 구속했다.

심지어 공안검찰은 효순·미선 압사 항의 촛불 시위 사진, 북한 예술공연단 관련 비디오 테이프 등도 국가기밀이라며 전 범민련 부의장 강순정 씨를 구속한 바 있다.

저들이 진보 진영 인사들에게 ‘국가기밀 유출죄’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탄압받는 당사자를 고립시키고 진보 운동 전체가 마치 사악한 이적행위자들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지키려는 ‘기밀’은 대부분 평화를 위협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해로운 반민중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어 이시우 씨가 폭로한 비무장지대 대인지뢰 살포, 열화우라늄탄 배치, 핵잠수함 기항 등은 정전협정,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북미 제네바 협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또,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조차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자이툰 부대 파병과 주둔지 활동 관련 정보도 대부분 기밀이라며 공개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기밀들은 오히려 폭로하는 게 민주주의와 진보에 유익할 때가 많다. 2005년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시모어 허시는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등에서 사용된 고문 수사 기법인 ‘특별접근프로그램’(SAP)의 존재를 폭로했다.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평택 미군기지 관련 정보와 제주도 해군기지 관련 정보들은 한반도 평화 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세계 수준에서 벌어지는 “테러와의 전쟁”과 신자유주의 공세는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다. 지배자들은 민중의 삶을 파괴할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비밀’ 보호 관련 법규들을 강화했다. 최근 국정원도 ‘비밀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기밀 유출 처벌조항을 강화하려 한다.

따라서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은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운동은 그 출발점이다.

한규한

“저들은 예술 작품에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지난 5월 1일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축약한 것이다. 편지의 전문과 이시우 씨의 작품들은 그의 홈페이지(<http://www.siwoo.pe.kr>)에서 볼 수 있다.]

공안당국은 제 창작 과정의 일부인 저술뿐 아니라 사진 작품에 대해서까지 군

사기밀 유출 혐의를 씌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에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은 없다’란 구절에서 ‘하나님은 없다’만 떼어내면 정반대의 의미로 왜곡되는 것과 같이 저들은 예술 작품을 칼질해 혐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창작 과정에서 사진을 발표한 것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예술적으로 완성됐다고 생각되는 작품과, 둘째는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알권리를 위해 발표된 것들입니다.

‘국가기밀이기에 촬영해선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은 ‘창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창작을 통해 기밀 보호보다 더 큰 가치를 국가는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헌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창작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관점도 문제지만 기밀의 테두리에 씌워 탄압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공개한 두번째 종류의 사진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진들입니다. 핵무기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화학무기 역시 국민에게 치명적인 것이기에 정부가 기밀의 테두리에만 둘 일은 아닙니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발적 사고로 사람이 피폭했을 때 핵무기에 의한 내폭 증상과 똑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설령 그것이 기밀일지라도 공개돼야 할 것인데, 제 발표는 합법적 경로를 거쳐 획득된 자료들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대상으로 10년 넘게 사진작업을 해온 제 사진은 군사기밀보호법의 혐의가 씌워진 채 어찌된 ‘모내기’ 그림으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신 신학철 화백의 그림처럼 철창에 갇혀 영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운명에 있습니다.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일까요?’라는 질문에 데모크리토스는 ‘심장’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아픈 곳’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아픈 곳이 치유될 때까지는 온통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서고 싶습니다.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듯 사회의 중심도 아픈 곳입니다. 세계의 중심 또한 전쟁과 기아와 빈곤 때문에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에 사회의 모순과 세계의 모순이 집중돼 있습니다. 시대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예술가에게 그것은 숙명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머무르고 있는 장소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결’, 평화와 통일의 ‘결’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의 요구에 국가보안법이 더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